第288回國會 (臨時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3月30日(火)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국무총리실
   나. 외교통상부
   다. 행정안전부
   라. 보건복지부
   마. 노동부
   바. 여성가족부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보고(계속) ····· 1
   가. 국무총리실
   나. 외교통상부
   다. 행정안전부
   라. 보건복지부
   마. 노동부
   바. 여성가족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국무총리실

나. 외교통상부

다. 행정안전부

라. 보건복지부

마. 노동부

바. 여성가족부

○위원장 변재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경제 부문 5개 부처와 2개 청으로부터 고용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6개 비경제부처에 대한 고용 관련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오늘 보고서에서도 국무총리실 보고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어제 기획재정부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 경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 여건도 개선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본다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고용 여건은 '절대 호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브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 속에서 과연 경기가 회복된다고 그래서 진짜 고용이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회의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누차에 걸쳐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 재정지출이 어떤 형태든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가 나타난다든지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은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은 우리 대기업이 수출주도형 대기업이고 또 대부분의 수출 제품이라는 것이 부품과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장이 국내 내수의 진작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 유발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모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정책을 국정운영 과정의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하셨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국회 내의 모든 정당에서도 고용 문제 해결을 각 정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밝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현재의 고용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국회 내에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여와 야가 전혀 이견이 없고 또 오늘 여기서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각 부처가 제시한 사항 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항은 정부가 일정대로 개선해 나갈 일을 갖다가 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로 옮겨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확인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사항,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 당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고 각 당 간에 어떠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측에서도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회와 협조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처로부터 일자리 관련 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위원님들 질의는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에 대응하여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제지표들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고용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힘쓰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국무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평가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무총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민 사회통합정책실장입니다.

권태성 재정금융정책관입니다.

김원득 문화노동정책관입니다.

최대용 평가관리관입니다.

김효명 규제총괄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시 한번 변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무총리실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김석민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김석민 사회통합정책실장 김석민입니다.

금년도 국무총리실의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정부의 일자리대책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고 저희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운영계획과 규제개혁 및 일자리대책 평가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자리대책 추진체계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고용전략회의 아래 3개 TF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중 총리실에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운영해서 재정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추진상황 관리·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44차례의 TF 회의를 개최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사업 등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화 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고용상황 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부처별 일자리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금년의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업애로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층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 등 취업대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와 고령자·베이비붐 세대의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재분류해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확충과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58만 명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청년인턴사업과 사회복지, 교육 등 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며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일을 통한 복지 구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은 2월 말 현재 전체 채용인원은 25만 명으로 계획 대비 42.6%입니다마는 3월부터 희망근로사업 등이 본격 시행되어 3월 말이 되면 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1071개 규제개혁 과제 중 투자활성화, 미래성장기반 구축, 서민생활안정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 관련된 과제는 746개입니다.

또한 총리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영업자 및 종사자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앞으로의 일자리대책 평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총리실은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통해서 집행 부진사업이나 애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일자리대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

기 위해서 반기별로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된 과제 중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특정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부처 관련 과제나 사회적 이슈가 된 과제 등 주요과제에 대한 수시 현안평가도 실시해서 우수 추진성과를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나 중장기 과제 등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 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일자리대책이나 중소기업 빈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이하는 그동안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논의한 과제의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리실은 보고드린 이 사안 등을 통해서 각 부처의 일자리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인해 서민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알맞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보육,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탈빈곤 지원 제도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간병이나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이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넷째, 해외환자 유치, u-헬스 등 보건의료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의료기관 인력기준과 의료수가 등을 일자리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병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입니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입니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입니다.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김원종 노인정책관입니다.

권덕철 보육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인물로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는 유인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고용동향, 세 번째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저희 부처의 조직과 그리고 금년도의 재정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구두설명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 분야 고용동향입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의 부진하에서도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3월 달에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약 102만 3000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율도 2009년도에 4.25%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115만 개 내외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첫째, 기존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등 신규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까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 제도개선, 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이 제도를 좀더 내실화함과 아울러서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돌봄서비스, 즉 가사간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 이런 각종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함과 아울러서 돌봄인력들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늘려나가고, 아동복지교사를 확충해 나감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와 함께 관련되는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로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자활근로를 확대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활공동체의 프랜차이즈화·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고용도 촉진해 나가고, 주거현물급여라든지 양곡택배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에 대해서는 문화재 해설이나 학교급식 도우미 등과 같은 공공분야 일자리 16만 6000개와 함께 지역특화·기업연계형 민간분야 일자리 2만 개 등 노인 분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즈음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력형성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사업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도 착실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셋째로 신규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인 분들을 위한 표준화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경로당의 노인건강프로그램을 금년도에 4000개소로 확대를 해서 요가라든지 유연성체조, 그리고 근력운동 등과 같은 전문 강사를 파견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이들의 일자리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의 부담이 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함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의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환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한 7만 명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관광업계의 시장 확대와 함께 그리고 병원국제마케터 등 새로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u-Health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u-Health은 의료와 IT가 융합돼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전문인력들의 고용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울러서 임상시험서비스의 인프라를 강화해서 임상시험의 전문인력, 즉 임상연구자라든지 임상연구윤리자, 임상약리학자, 제약의학자 등의 인력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 해서 관련 산업들의 육성과 함께 전문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친화형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을 상향하고, 그리고 양방과 한방이 융합서비스를 하고 상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주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토록 함으로 해서 그 인력들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 친화형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해서 관련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책을 통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와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일부 긍정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 2월 중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여성·청년·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노동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서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된 청년·근로빈곤층·여성·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보다 촘촘한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여건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사회구조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고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노동부 직원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최고 고객으로 여기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과정부터 재원마련, 정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재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2010년 고용정책 주요업무' 보고는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노동부의 '2010년 고용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고용정책 추진현황, 금년도 고용정책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입니다.

금년 2월 취업자는 228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5000명이 증가하여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가 2008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도 11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4000명이 증가하였고, 청년실업자는 43만 3000명으로 실업률이 10%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위기과정에서 고용여건 악화의 영향은 임시일용직과 여성·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경기가 회복하여도 고용의 회복속도는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전망은 경기회복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가 20만 개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는 고용회복 전략을 통해 취업자 증가를 25만 명 이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고용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 대응하고, 범정부적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완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규모는 정부 전체적으로는 8조 9028억 원이고, 이 중 노동부 일자리 분야 예산은 5조 4512억 원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지난해 추경예산보다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정책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졸자·전문계고 청년 구직자 80만 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 개의 DB를 확충하고,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학교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학생 5만 8000명과 졸업생 7만 9000명에 대해 기업채용 수요 등에 맞추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원효과가 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층의 창직·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해외취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하는 여성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대량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직무·직능급 전환 지원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화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정년·임금·근무시간 등과 연계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해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견인력종합센터 등을 통해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

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공공부문 고용률 3% 달성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반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광역단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주치의를 배치하여 1 대 1 관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적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폴리텍대학 학과를 개편하고, 녹색산업 훈련 직종을 추가하는 한편,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녹색자격종목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집체훈련 위주에서 현장훈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말·단기 고급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인·구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 중개를 고용서비스산업 차원에서 육성하여 일자리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 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고 지자체 및 기업 참여를 통해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별 특화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여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고용사업 수행 시 노사민정 협력채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9일자로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오늘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출범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의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가족·청소년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들의 잠재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육성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정봉협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임관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부 일자리 만들기 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태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부의 일자리만들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내외 환경으로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약 30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약 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특히 30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고급인력이 유예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지금까지의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정책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써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으로 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의 확산, 기업의 일과 생활의 조화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직장 및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분야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부 지원 여성 일자리를 점검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육자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여 아이돌모보미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와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과 추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자와 청소년 동반자를 배치하여 청소년 상담분야 등 전문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 일자리 연계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먼저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만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연계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취업설계사와 새일여성인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취약계층의 특화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고학력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일과 생활의 조화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남녀근로자 모두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연근무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근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선진국의 경우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시범기관 MOU를 체결하였으며, 정책개발연구와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정 부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위 양육 및 가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추진체제 강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새일지원본부를 지정 운영하고,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대생에 대한 진로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동 센터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지정 운영하고 직업정보,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에 있는 정책추진일정과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일자리정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나오셨지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천영우입니다.

오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절박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또 정부가 창출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외교부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해외일자리 만들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특히 글로벌코리아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 양성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창출사업은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이행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는 차세대 특수지 특수언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급증하는 재외국민 보호업무와 재외국민 선거지원 업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 이상의 영사 보조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런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훈 개발협력국장입니다.

최연호 조정기획관입니다.

한충희 인사기획관입니다.

이수존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경훈 개발협력국장이 외교통상부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개발협력국장 설경훈 개발협력국장 설경훈입니다.

외교부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 교육·의료·IT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인력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해서 개도국에 2년간 파견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19년간 약 6300여 명의 KOICA 봉사단원이 53개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의 일환으

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500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1000명의 KOICA 해외봉사단원이 33개 개도국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봉사단 현황은 총 43개국에 1600명에 이릅니다.

해외봉사단 사업은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원들의 현지어 능력이라든지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 다문화에 적응하는 능력 등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부터 도입된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7쪽입니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분야 경력이 20년 이상인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들을 개도국에 6개월 이상 파견해서 개도국에 정책 자문이나 지식 전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제20차 총리실 산하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에서 외교부와 지경부 공동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도 시범사업 실시 이후에 금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차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의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은 저·중소득국에 정책 자문과 지식 전수를, 지경부의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은 중·고소득 개도국에 기술·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각 50명씩 총 100명 파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차세대 특수지 특수언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외교부는 156개 공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5개 공관이 아랍어, 러시아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등 특수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수지로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앙골라 등은 석유, 광물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며 원전, 고속철도 등 우리나라가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 중인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특수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공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 전공자를 양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언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00명씩 총 200명을 이와 같은 특수지이자 특수언어 재외공관에 파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크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언어 전공 대졸 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들의 해외 취업 활성화를 지원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워킹홀리데이 이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국제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참가자 유치를 통해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신규 협정 체결국 증대 및 기존 쿼터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5년 호주와의 협정 체결 이래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순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쿼터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 약 5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워킹홀리데이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지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해외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작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취약계층 고용과 자활기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아서 현재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조성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월 8일

부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을 가동하고 1월 21일에는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역일자리창출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고 더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월 지역일자리창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대책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일자리특위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행정안전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입니다.

다음 김성렬 인사정책관입니다.

다음 심보균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발전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오동호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추진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부문별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도 정비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금년도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가 지역 일자리 창출임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 금년도 지역 일자리 여건을 보면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이라든지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실업·저고용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역 산업 여건, 지자체 노력에 따라 지역 간 고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목표와 과제는, 추진 목표를 더 많고 더 좋은 지역 일자리 조성으로 정하고 세 가지 추진전략 속에서 총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4개 과제, 민간부문에는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 지원체계 제도정비에 3개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일자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작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개요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내용으로는 지난해와 달리 열 가지 친서민·생산적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자와 기업체 간에 만남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라든지 산업단지 지역일손 부족대책도 아울러 마련을 했습니다. 농번기에는 희망근로를 일시 중단하고 또 농기계지원추진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밀집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예산을 감축해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Post-희망근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가 종료됨에 따라서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5만 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688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희망근로와는 달리 청장년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기본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역별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접경지역형으로 유형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추가해야 될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중에서도 비교적 생산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1시·군·구에 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 정착을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모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별로도 순천시, 장흥군, 완주군, 지역별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해서 안정적인 주민 주도형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초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총 1만 3360명입니다. 그중에 중앙행정기관이 4000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9300여 명입니다. 상반기에는 1만 2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334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무기간은 5개월, 주 30시간으로 하고 소요 예산은 전체 511억 원입니다.

작년도하고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고 특히 직무 특성이라든지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해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도 채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크게 두 번째는 민간부문 고용지원을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기 설립한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상담·알선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전 읍면동 주민센터를 취업 지원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취업박람회라든지 Job 페스티벌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시군구별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로구 같은 경우 1849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937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유도입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용 증대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차보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아울러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거나 작업환경 개선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입니다.

3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공동사무실 지원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청년 창업 확산을 위해서 국민 제안 아이디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표준 정책모델을 정립하고 또 조례도 제정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저희 행안부와 시도, 그다음에 230개 시군구에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 장·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방자치단체장 주재하에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운영하는데 특히 이것은 지역단위에 있는 노·사·민·정 협의체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재원은 경상경비라든지 축제 절감분,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일자리 정보·통계시스템 정비입니다.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Work-net)하고 지자체의 취업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연계를 강화하고, 또 아울러 읍·면·동의 읍·면·동 공무원들이 워크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 고용통계가 연 1회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고용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고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종합평가를 하고, 특히 역점과제인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5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시도 평가, 또 평가단에 대한 서면평가,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도 거쳐서 최종평가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는 과제별 추진일정입니다. 과제별로 일정을 정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방금 보고한 6개 부처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어제에 이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민주당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부도 얼마나 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부서는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서는 현재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다 모아 가지고 고용창출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제가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 고용정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재부한테 물어보니까 노동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국가고용전략 그것을 6월 말 정도로 지금 전체 부처 간 논의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인재 10만 양성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Go Future’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 4월 달로 거의 끝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입력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보니까 노동부의 그런 포털하고 합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건 또 언제 준비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지금 하여튼 이 고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목표를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최대한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이제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우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지난 3월에 개최된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여기에서 실업급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셨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피보험단위기간 한시적 단축 운영을 과제로 삼았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180일을 12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무총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월 24일 개최된 20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은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의 자료에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이런 걸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관심을 못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법이 올라와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최영희 위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최영희 위원 피보험기간 한시적 단축…… 맞습니까, 노동부장관님?

고용보험법 개정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입법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거 좀 저한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180일을 120일로 하는 것,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지난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고용보험 기금 재정 때문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일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려면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이게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입법으로 나가서 환노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상희 의원님, 또 홍희덕 의원님께서도 이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심층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원들이 아무리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 산하 이런 TF를 구성해서 각 부처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 노동부와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적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 정부에서도 아주 성의 있게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그 부작용과 긍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노동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희망근로 참여자, 행안부에서는 희망근로에 대한 것을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가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산업재해가 총 2011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해율이 1.69%이니까 전 산업재해율이 0.7이거든요. 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준토목사업의 성격을 가진 임업사업 분야에서 재해율이 90% 이상 증가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숲 가꾸기 사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 산재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또 결국 부담이 민간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민간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지 노동부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연령대별로 재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60세 이상 연령대 참가자들의 재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별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재해 이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배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추경이 집행되고 그러면서 인턴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인턴사업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해외인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교과부, 농촌진흥청,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해외인턴으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특히 해외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력으로 잘 들어가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인턴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받고 끝나면 그건 복지 차원밖에 안 되고 이게 경력으로 되려면 어떤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인턴 결과에 대한 그 평가며, 그다음에 그런 일을 했던 구인을 하는 데서 쓸 수 있는 자료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통합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작년에 외교부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배은희 위원 아니,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해외인턴사업 제도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게 통합 관리가 안 되고 DB도 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턴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 일에 대해서 그 경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노동부장관님께서도 아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그 DB 관리, 그러니까 DB만 구축해 놓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퀀터티(quantity) 보다 퀄러티(quality) 내용이 들어가는 DB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배은희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구하려는 사람도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을 찾는 기업도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DB 구축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일자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이나, 예를 들면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해결된다는 게 지금 딱 돼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은희 위원 지역 일자리까지 또 연결되니까 굉장히 이게 찾는 데가 복잡하더라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그런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금 체제를 구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잡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잡(job)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잡,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게 저희가 기업별 데이터를 보다 보면 대기업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요,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늡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늘려 놓은 일자리를 거의 해외인력이 채우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잡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지까지는 직업을 만들어 놓고, 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기업에다 주니까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저 잡은 약간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할 때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채우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원하는 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겠다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업자한테 직접 주는 그런 사업 시작하셨지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배은희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소득공제 해 주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배은희 위원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소기업에 한번 가서 일을 해 보게끔 만드는 유인책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아주 좋은 유인책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산업기능요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총리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병역을 필한 걸로 만들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가는데 그 기간을 끝내고 계속 남아 있는 비율이 한 50% 정도 돼요. 한번 가 보니까 좋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2012년에 지금 없어집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인 이하의 직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계고 학생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대신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전부 고학력이라 잘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유인책을 주는 방법으로서……

○배은희 위원 이게 병무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군인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걸 좀 조정해서 2012년에 이 제도가 안 없어지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정책이 좀 반대로 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했는데 지식경제부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많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발주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오히려 통합발주를 많이, 예를 들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이런 것을 하면서 통합발주 쪽으로 밀어가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다 하는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역행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건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 간에 역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건설산업 자체의 효율성이나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합발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 또 개별 산업 보호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분리발주, 현행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설산업,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에는 분리발주

를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라도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공공분야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도 광명 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일자리특위를 만들면서 행정부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찌 보면 일자리특위가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국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재일 위원장이, 야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특위를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기 특위위원 20여 명이 안 되는 인원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고 아무리 정책질의를 한들 얼마나 해내겠습니까? 내용을 몰라서도 못 해내는 것이고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단히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이런 위원회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특별팀,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법률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특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하고자 하는 일들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처별로 이기주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규제를 풀 때 각 부처별 이기주의 때문에 못 풀어가는 내용들 이런 것을 진정하게 협의를 했을 때만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묶여 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그런 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풀어가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진지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내용을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하든 해서 계속적으로 챙겨 가지고 비슷한 법이라도 저는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 하겠지만 여러분이 부탁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내용이 맞다면 제가 입법을 해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측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규제가 전부 없다, 꼭 있어야 할 규제가 뭐냐부터 챙겨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부 없애버리고 나서 꼭 있어야 할 규제가 뭐냐, 하여튼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들한테 부탁을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OECD 국가 중에, 우리 근무시간이 연간 기준 2316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2000시간 넘습니다.

○백재현 위원 2300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72시간이에요, OECD 평균이. 그러면 OECD 기준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2316시간이면 최하위권에, 끝에서 두 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38%나 많은 근로시간을 과감히 2000시간대로만 줄여도 20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꼭 임금을 줄여야 된다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임금을 주면서도 생산성을 얼마나 높여갈 것이냐 하는 것이 기업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반드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산재가 획기적으

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중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한 결단을 해서 과감히 200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져야만 다른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일하는 시간만큼, 2300시간에서 300시간 노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그 300시간을 만든 만큼 뭔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산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점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좀 묻고 싶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각 근로형태, 산업의 형태 이런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단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노동부 산하에 콜센터에 4.5시간 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업무집중도도 높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한 육칠십% 정도의 일을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서는 적게 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이런 사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서는 단시간 근로에 기본적으로 가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혼자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그것을 원하고 이래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쪽부터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아주 오래 근무하는 근무관행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지 더 이상 실업 문제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이 문제도 노사 간에, 노동계 또 경영계 간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당사자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460만 시대에, 400만이 넘는 실업시대에 이런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고쳐야만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지 계속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결단을 못 한다면 실업 문제는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선진화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작용들을 점검하면서 이행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데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전재희 장관님 한번 좀……

한 5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 생기면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제가 병원 인력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500병상이면 몇 명이라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혹시 실무자들, 뒤에 있는 국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병상당 보통 2.6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병상당 2.6명이니까 500병상이면 1500명 내지 1300명쯤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업종별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섭니다. 막연하게 청년실업이 어떻고 여성실업이 어떻고 이것은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업종별로 놓고 획기적으로 낼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분석을 안 해 보면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병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병상이 부족한 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은 병상과잉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낙도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가 의료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크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백재현 위원 하여튼 어떤 업종이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수치로 봐서 이게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야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통계, 고용인력을 일자리를 늘리는 창출과 관련돼서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를 노동부에서 하나요, 총리실에서 하나요, 기재부에서 하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번에 25만 명 플러스 알파해서 25만 명 이상의 목표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25만 개 일자리를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 게?

○노동부장관 임태희 세부적으로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달성해 나간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있는지 여부는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량으로 있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아니면 여성들 부분에서,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적어도 일자리 문제는 각 부처별로 장관실에 상황판을 붙여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상황판을 붙여놓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는 일자리의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각 부처별로 보고서 내용이 틀린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에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기본적으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년이면 청년, 노인이면 노인 또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 분야별로만 정하지 장애인이면 장애인에서 1만 명을 늘린다, 그러면 장애인 1만 명에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1만 명을 늘릴 것이냐 구체적인 장소가 들어가야 돼, 장소가.

○위원장 변재일 정리해 주시지요.

○백재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부와 관련돼서 외통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외에 내보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 내보내야 되는데 해외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에 내가 최중경 대사를 만나서, 필리핀 대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분이 경제부 차관 하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경제부 차관 하다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필리핀과 우리나라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구체적 내용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외국에 내보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각 나라별로 특성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재현 위원 어제 회의에 안 나오셔서 3분 초과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태신 실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태희 장관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요, 일단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몇 개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우선 인구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TAFE 교육기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들어 봤습니다.

○안효대 위원 전문교육기관인데요, 한 6개월부터 2년간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리프레시(Refresh)하는 것부터 해서 마스터 과정까지, 호주 전역이 다 그렇게 골고루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45세가 A과정 했다 그러면 46세가 돼서 B과정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B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아주 전문화되고 세분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폴리텍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각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커리큘럼이 다 틀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호주의 TAFE와 같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청년층이, 취업 애로 계층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핵심 맴버들인데 이것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청년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아마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그보다도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청년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연결을, 가령 고용지원센터나 또 다른 직업박람회를 통해서 해도 청년들이 잘 안 가게 되고, 우선 인식의 문제도 있고, 가서 보면 또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의 경우에 좀 희망적인 것은 아까 배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보면 다시 또 정착해 가지고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인턴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약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선 중소기업의 구인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DB를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취업지원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둬서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직업능력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결국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아마 중소기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청년들의 경우에는 도전하고 좀 창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창업하고 창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들에게 창업·창직을 전적으로 준비하고 또 창업·창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매치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식전환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82% 내외 되지 않습니까? 고학력인데, 대학 졸업한 이런 친구들이 사실상 3D업종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주입을 하는 일이라든가 또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안효대 위원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보면 청년층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기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경제가 어렵게 되면 어려운 일자리든 파트타임이든 열심히 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부터 의식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의식전환이 돼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의식전환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또 국가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그 일 못 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결국 외국인으로 일자리들이 다 메워지게 되는 악순환이 자꾸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 여건이 호전이 되면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식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안효대 위원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일차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을 저희들이 판정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또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또 구인자와 구직자 간 직업능력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러니까 교육훈련으로 연결시켜 주고 취업과 구직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제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고용지원센터보다는 취업지원센터로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피동적이 돼 버리고요, 또 소극적이 되는 것이고, 취업이라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취업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한다라면 취업지원센터로 바꿔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 관련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요, 기업에서 저희 취업지원센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선발해 달라 하는 수요도 꽤 있습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고객이 있고 또 구인자를 원하는 고객이 있어서 아마 고용지원센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동부의 임태희 장관님께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으면서 차관님이 계속해서 '고용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은 성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처에서 고용정책을 세우고 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내에서도 총리실이나 또 노동부에서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정책을 보면 사실 우리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부에 우리 임태희 장관님처럼 힘센 분이 오시면 노동부에서 좀 하는 척을 하다가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기획재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내에서 그런 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용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식기반의 사회로 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이 고용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백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같이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시키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2316시간이면 저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에 속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없고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도 사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한테는 임금피크제를 해서라도 좀 정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보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까 고령자들은 빨리 퇴출을 시키면서 신규사원들을 늘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경제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이런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 인식도 필요하고, 서로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접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거기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사회 주체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놓고 같이 현실을 파악하고 토론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가 목표를 두고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경제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노동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년 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좌파 척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 가득 찬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사회적 합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멀쩡한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설립신고를 안 내줍니다. 2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허가제에서 설립 신고를 하는 신고제로 바꿨는데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노동 탄압과 배제정책을 가지고는 저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특히 노동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면 그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아니고 어떤 경제계의 대변인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발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일자리만들기특위에서 정말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좋지만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도의 공감대를 만들고 좀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라도 만들어 내면 큰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리실이나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동 현안 또 고용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아까 예시해 주셨던 임금피크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사·민·정 간에 지금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 중에 지적하신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장하고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울의 강동을 윤석용입니다.

회의 때마다 전번에는 기재부 관계자가 왔는데 이번에도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없이 어떤 정책도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입안할 수가 없는데 기재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국무총리실에서도 좀 참석을 해서 이런 일자리 문제도 업무 간에 서로가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까지도 같이 치유하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국제결혼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놓고 외국의 부인들이 다 이혼하고 외국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아기를 다 돌봐줘야 되고, 일손이 부족한데 더더욱 가중되는 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어제 보육 문제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당에서도 보육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해도 기재부에서는 '그것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고용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통계치가 ILO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감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조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정과제가 하나 선정이 되면 각 부처 간에는 또 정책 경연대회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동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또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노동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신경을 써야지 노동 수요적인 측면에서 너무 신경 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입안할 때 방법을 좀 잘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가 대폭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잠재적인 실업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있으면 그 대책이나 정책을 저한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작년에 12조 정도의 돈을 일자리 창출에 썼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윤석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저희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하는 희망 프로젝트하고 청년인턴 이런 것을 저희들 평가실에서 평가를 했는데 대체로 직접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또 지방의 여론이나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15개 부처나 청이 했습니다, 그 돈을. 그런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산이 60%,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의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평가체제를 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좀 해서, 인턴사원 아까 지적도 많았지만 한시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써 버리고 고통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효과였지 채용이 다음에 연장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정부 간에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로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영이 어려울 때는 기업이 이문이 별로 안 나 가지고 세금 낼 돈도 별로 없고 또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 줘도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책을 좀 바꾸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방법은 이걸 포인트제를 도입해 가지고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 속에서 수요자가 자기들이 찾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야지 무조건 세금 안 내는 사람보고 '세금 내지 마라' 이거는 별 효용력이 안 없겠나 이렇게 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여기에 대해서 노동정책이 빨리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대응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불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부 장관님이 잠을 못 잔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잠 좀 잘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도 주로 대기업, 수도권에만 지원하지 중소기업, 지방기업에는 도대체 지원을 안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IMF 이후에 10.1%의 청년실업이 작년에, 올해 10% 정도 됐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통계치로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대학 졸업하면 거의 반이 놀고 앉았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여성 졸업자들, 이 국고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 행사 때, 회의 때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대증 처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아까 말했던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빨리해 가지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을 줄여야 되고 또 대학교육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기업 수요에 맞게 대학을 놔야지 무조건 대학만 디리 늘려 가지고 지금 이거 뭐 합니까? 교수요원은 박사를 받아도 교수나 채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방대학이 지금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의, 중국의 유학생들이 취직을 핑계로 와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하고 취업 전문대학을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요새는 4년제 나와서 전문대학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기 학과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교육제도를 빨리 바꿔야지 일자리만 우리가 백날 의논해 봐야 안 되고 부처 간에 진짜 이런 문제를 조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위원장 변재일 예, 윤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일자리 특위에서 한나라당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노동패널 조사자료, 고용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봅니다. 취업자 및 실업자의 이동 경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요. 일자리 특위에 참석하신 대다수 위원님들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자료도 바로 노동패널 자료입니다.

노동패널 조사사업은 보통 매년 4월부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지금 노동패널 및 고령화연구패널 조사가 당장 내일모레 4월이면 시작되어 가지고 고용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자료로 써야 되는데, 올해도 4월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노동연구원이 대부분 수행하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 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동안에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홍희덕 위원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현장 실사가 연기되었고 설문지 개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노동부가 노동연구원 직원들의 작년도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손봐 주기 식으로 연구용역을 완전히 중단한 것 아닙니까?

노동패널 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도 연구용역을 맡기던 노동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하지 않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지금 노동패널 조사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부가 향후의 고용정책을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2010년도의 노동패널 조사, 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노동연구원의 파업을 손보기 위해서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고 노동연구원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동부가 수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실제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작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저 상태로는 으레껏 그동안에 노동부의 용역은 무조건 노동연구원에 준다 하는 식으로는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작업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패널 조사나 고령화 관계는 저희들이 노동연구원에 수행하는 인력이, 노동연구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준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홍희덕 위원 점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연구원에서 하던 여러 가지 또 고성과 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는 데 조금 일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요것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우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는 지난 12년간 줄곧 노동연구원에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입니다. 78억 원이 투입됐고요, 고령화연구패널도 5년간 3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사업입니다.

이런 것 쭉 해 내려오던 것들을 당장에, 이건 매년 4월이면 실시되어서 나와야 되는 자료들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찾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도 제대로 노동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태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로 제시된 노동패널 조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당장 연구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두 가지 정도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해결 그리고 청소년들과 중소기업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워크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워크넷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워크넷의 1일 평균 접속자 수하고 구인 인원 또 구직 인원, 워크넷을 이용한 취업자 수 등을 연도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특히 취약계층, 그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장애인들의 직종별 취업자 수하고 임금 수준별 취업자 수, 그리고 장애 유형별 취업자 수를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차관님!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홍희덕 위원 행정인턴사업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실태 조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각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된 행정인턴 현황과 그중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과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어저께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특위 2010년 업무보고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권 발행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있는 대로 좀 내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라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영리 법인에 의료채권이 발행이 되면 자금 조달을 낮은 금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이 몇 개가 된다고 하는 분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희덕 위원 갖고 있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홍희덕 위원 그렇더라도 없다라는 그거라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아니, 저희들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을 계량해 내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어그러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가, 수치가 발전해 가면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로 전 부처가……

잠깐만요……

○위원장 변재일 보충질의 하시지요?

○홍희덕 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 변재일 예, 추가질의 하시지요.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더 많이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홍희덕 위원 아니요, 잠깐만 하면 되는데,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변재일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추가질의 하시지요.

○홍희덕 위원 아니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1분 드려요.

○정진섭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다음 사람 하도록 하게.

○홍희덕 위원 하던 거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각 부처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마이크가 안 눌러지셨네요.

○정진섭 위원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함수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고용이 좀 적게 된다는 뜻이지 성장이 됐는데 고용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재정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해 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 안 들이고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규제를 좀 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에 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런 식이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규제를 움켜쥐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해 줘 가지고 나가버린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 아닙니까? 우리 총리실에 이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예컨대 외국 같은 경

우를 보면 어떤 기업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하나 붙어서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규제 완화,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실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이 뭐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이 나는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알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기업들이 투자를, 소위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고용 효과가 과거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 쪽의 문호를 개방하고 또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 특히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의료·교육·관광 이런 분야에도 또 엄청난 규제들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평준화라든가 국민개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정진섭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특위가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알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또 총리실에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세 번째는 주로 미스매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에서 일을 할 때 지방공단에 가 보면 지방공단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부가 하는 어떤 미스매치를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그러면 중소기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안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줘서라도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풀어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런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찾아야지요.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지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굴해야지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알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노동, 아까 여기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벌써 4.3%의 실업률이다, 이런 것이 참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에 기초한 자료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 만든다'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새로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업률을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냅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정책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사실상 실업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해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실업자'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하였습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이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큰 논리에서 말씀을 대개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외무부가 하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같은 것 보면 제가 호주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 박혀서 접시 닦는 일이나 하고 있으면 영어를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일 갖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음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사후관리 부분이.

과거 일본의 경우에 버블시대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햄버거나 팔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 해 본 게 없거든. 경험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인턴들 많이 집어넣지만, 그러면 청년인턴으로 가서 일한 사람이 그 기업의 채용순위 대기번호를 받아 가지고 그 기업에 일자리가 나면 이 순서대로 채용해 준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사나 하고 이런 것만 배워 가지고 그 청년인턴이 제대로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젊은이들에게 이런 인턴 기회를 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채용과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연결 문제 또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정진섭 위원 정부가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여하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정진섭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실장이 전부 챙겨 주십시오,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행안부가 희망근로 잘하고 계신데 농번기에 아주 말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농번기에는 중단하겠다는 보고가 있던데……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맞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농번기인 6월이라든지 이때 2~3주 정도를 쉬게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을 돕는 기동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에 원성이 없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초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이미 그전에도 대선을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경제를 망쳐놨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전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망쳐놨는지 한번 따져 봤습니다. 이전 정부가 일자리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없앴고 또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전 정부 당시에 점차적으로 회복되던 고용률·실업률이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당시 3.6%이던 실업률을 임기가 끝나는 2007년에는 3.2%까지 떨어뜨렸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실업률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4.9%까지 올랐어요.

고용률,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취임 당시 59.3%였던 고용률이 2007년 퇴임 때까지는 59.8%로 잘 지켜져 왔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달에는 56.6%

까지 급락을 했어요.

총리실장,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운용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도에 리먼브러더스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우리가 회복을 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금융위기 어려움 이건 이해는 하는데요, 세계경제 위기설이 대두된 것이 대선후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오고 있어요.

또 '일자리 300만 개 만들겠다'는 공약 어떻게 이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어요. 지난 2년간 매년 10만 개씩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 이행하려면 앞으로 남은 임기가 3년, 매년 약 110만 개씩 3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기재위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 명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치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일자리 300만 개 한꺼번에 만들려면 공약 이행이, 30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공약 이행이 가능한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대선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저희가 결국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야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7% 이상 고성장할 때는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고용 없는 성장 문제로 어제 아주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총체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의 37%인 43만 3000명이 청년일 정도예요.

노동부장관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 일부에서는 '청년백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들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 반려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요건에 맞지 않아서 보완…… 반려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항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노조를 만든다는 의미 외에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상만을 모면하는 대증요법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 정부에 행정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당장 악화되는 고용통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관 나오셨는데 작년에 희망근로 포기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작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균 위원 예.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그거 확인해서……

○김재균 위원 전체 33만 8909명 모집에 8만 8993명이 탈락해서 24.2%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작한 지 3주 만에 전체 선발 인원 11만 2164명 중에서 19%인 2만 1258명이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데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희망근로의 중도포기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일의 생산성,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액이 너무 줄어서 그래서 많이 포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중도 포기자가 감소되는

추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정부가 자꾸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만 일관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일자리 사정은 안 좋아지고 불만만 지금 쌓이고 있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통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총리실장, 본 위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늦은 시간 참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임태희 장관님, 계속 질문이 노동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난 12월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5인 이하, 뭐 한두 사람 두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을 어떻게 내시는지 아십니까?

50대의…… 그러니까 50%, 5 대 5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종업원 돈을 다 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안 그러면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 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0% 가까이, 한 1600만 명이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그중의 한 30%, 3분의 1 정도가 다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한 500만 명인데 이 자영업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한 사람씩 더 고용을 하게 한다면 한 500만 명은 거뜬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한테, 어차피 이게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고용주가 50% 자기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안 그러면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외적으로 그 50%를 감하게 해 준다든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영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불안도 그만큼 잠재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이 너무 많은 이 현상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소망스럽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조를 그대로 고착시키는 쪽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가급적 신중한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희수 위원 지금 사실 새로운 일자리는 없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음식점 차리고 별도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아버리게 된다면 고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관님께서 생각을……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이쪽에다 추가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희수 위원 4대보험 스토리는 알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정희수 위원 원래 당초에는 5인 이상이었는데 나중에 DJ 정부가 와서 그 이하로 확대 적용을 시킨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정희수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반 정도의 부담을 덜어 주면 자영업자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이것도 지금 하여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금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얼마만큼 깊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현장의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얼마 전 3월 달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서베이(survey)한 결과인데 청년실업의 원인이, 대학생의 한 75%가 일자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75%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mismatch) 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우리나라의 전 기업들을 한번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또 그 자리에 근무하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다시 말해서 기업 환경입니다—이것을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환경이 엄청 개선이 될 겁니다. 또 알짜 기업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또 대학생들도 중소기업을 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벤처 붐이 일 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대기업을 선호했는데 그 벤처기업이 깨끗하고 또 스톡옵션이라는 강한 인센티브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좀 안 좋아서 벤처 붐의 결과가 실패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다, 적다에 대한 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좋은 중소업체라도 환경과 복지가 잘 만들어진, 이렇게 되어야 그야말로 대졸생들도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번 서베이해서 공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공동작업으로 해서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흔히 언론을 통해서 광고는 많이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일했을 때 개인의 발전이나 회사 발전이나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이런 기업들을 약 6만여 개 저희들이 선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상세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또 저희들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가면서 '3D 업종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3D 업종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3D 업종의 경우에 지원을 해서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클린 사업의 지원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동안에는 이미지가 3D 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업환경이 아주 개선이 돼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곳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문제가 기업의 사정이 계속 변화하는데 그것을 어느 주기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또 그 신뢰성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갈 만한 회사냐 하는 것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약 6만여 개 이렇게 저희들이 DB를 구축한 것으로 그런 작업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희수 위원 1분만 나도 더 하게……

사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우자동차였지요? 김우중 회장이 부평공장에 빵을 떨어뜨려도 집어서 먹어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클린 작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부터 생산성과 모든 것이 좋아졌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3D 업종이나 모든 환경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별하게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노사가 함께 고성과 작업장 혁신의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현장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임태희 장관님께 질의 겸 자료요구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할 때요. 장관님께 제가 일자리 창출 혹은 직업 훈련 명목으로 붙어있는 수많은 명목의 예산사업에 대해 한번 풀 스크린을 해서 실효성을 검토하고 통폐합 등 집중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장관님께서 '예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성식 위원 이 작업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저희들이 179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 언제쯤이면 국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1차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게 워낙……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 간에 조율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4월 중에는 큰 골격이 나올 것으로, 그런 목표로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그다음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일정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4월 중에 어느 정도 드래프트(draft)가 간추려지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하여튼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거시경제에도 밝으신 분이고요. 실제로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는지를 미시적인 노동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디를 잘 해결을 해야, 어떤 버틀넥(bottleneck)을 해결해야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한 종합적인 맵(map)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노인 일자리 늘리려다가 청년 일자리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상호 충돌적인 예산사업만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월 중에 장관께서 실무자들한테 지시하시고 직접 검토하셔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고용의 질이 나빠진 원인을 구조적으로 좀 분석하시고 그것이 각 부처별로 어떠한 과제가 거기에 걸려있는지에 대한 맵 작업을 좀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 작업은 국가 고용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6월 달에 그 작업의 완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조금 넘어가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언제까지든지…… 저는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 예산사업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월 달이면 조금 늦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부처별 예산들이 편성되기 시작하니까 가급적 서두르셔서 골격이라도 일찍 정부 내에서도 공유가 되고 국회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골격을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세 번째로 인구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력수급에 대해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림이 필요해요. 지금 한 53년생 언저리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의 부침에 따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인구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력수급 장기전망이 좀 서야 이 또한 고용 전략을 제대로 만드는 데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 되어 있거나 또 노동부 내에서 검토가 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력수급정책관이라고 국장급을 하나 뒀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회에 언제쯤 이 내용 보고 가능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마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또한 그러면 서면으로 그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노동시장과 연관해서는 과거에는 노동의 유연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다가 요즘은 유연화 플러스 안정화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전략' 이런 얘기가 학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 개정도 뒤따라야 될 문제들이 많고 또 차별화, 내부 노동시장의 분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또한 노동부에서 용역을 했거나 정책의 골격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연·안정성의 기본개념은 개인에게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될 수 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가 고용 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 이 부분에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입법사항과 제도개선, 예산사항이 들어가고 더구나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긴요한 문제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는 투자대로 안 되고 또 고용은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 형태로 사회적 대류 없이 한계직업 쪽에 속한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굳이 연구용역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한 7~8년 동안,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항이니까…… 노동연구원의 여러 가지 작업성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과제는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럼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언제쯤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내고—즉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또 언제쯤 입법을 하고 언제쯤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리시고. 안 그러면 시간은 이제 흘러가게 마련이니까요. 이 점도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근로자 개인에게는 안정성을, 그래야……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증대시켜야 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김성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저로서는 정리된 서면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조금 미시적인 문제로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와 비정규직 등 불안정 취업 계층에 대한 4대보험이라도 최소한 확보해 주자라는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긴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는 내용이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일정하게 대기업 노동자들도 양보한다면 사회적인 합의로까지 올 수 있는 잡 크리에이션(job creation)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설사 고용보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습니다. 액션 플랜(action plan)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어떻게든 풀어보자 하고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외통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 공관에서 지·상사 회의나 혹은……

현지에 본인이 혼자 고생을 해서 해외에서 취업을 잘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가 뭘 좀 더 해 주면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 쉽겠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관에서요. 공관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공관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지·상사 회의는 거의 분기별로 공관에서 경제 통상 관련 회의들을 개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사항의 핵심은 외통부의 지시로 각 공관에서 지상사 및 현지에서 국가의 도움 없이 어렵게 현지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해 줄 일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예.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5~6만 명을 해외에 내보내고요.

○김성식 위원 그것 갖고 잘 안 되니까 제가 차관님께 다시 한번 서베이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를 실시해야 되는데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행정안전부 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행정인턴 비용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올해는 1만 3000명이고요, 작년에도……

○최영희 위원 비용이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작년에……

○최영희 위원 1574억이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1574억이었고요, 올해는 511억입니다.

○최영희 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년들을 취업시키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턴으로 들어간 청년들의 불만족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적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행정인턴 교육훈련 계획이 이렇게 두껍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자료 내용에 행정인턴 훈련교육 계획을 보면 오리엔테이션 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 설명, 어떤 국정철학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철학 그다음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것을 홍보하고 국정시책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녹색성장 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홍보요원 양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것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불만 많은 청년들, 청년 실업자들 데려다 놓고서는 이렇게 정부홍보요원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 별로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청년들이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정부 국정시책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해서 홍보요원화 할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영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요원 양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삼고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574억이라는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청년인턴들 교육할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선도 모델을 발굴해서 민간에 확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새 일자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구체적으로 몇 개 이렇게는 제시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영희 위원 여성부장관님, MOU도 체결하고 그러셨지요?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그랬습니다.

○최영희 위원 몇 개나 일자리가 새로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OECD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단시간근로제가 1%포인트 실시될 때 여성 고용이 0.5%포인트쯤 올라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적에 응답자 대비로는 한 20% 또 전체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한 6% 정도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전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한 3~5%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로 하면 일자리를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원하면 다시 전일제 근무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기간 동안 단기간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최영희 위원 단시간근로제를 할 때 복지제도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5.5%고 상여금은 8.8%, 유급 휴가는 4.3%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도 얘기하셨고 또 다른 위원들 얘기하셨는데 사회보험 가입률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제 근로 유연화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임금에 있어서의 비율 보상체계가 좀 확립되어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풀타임 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부여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단시간근로제 확산이 혹시 비정규직 양산의 어떤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차별해소, 임금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령 풀타임으로 원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단시간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를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노동부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콜센터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무만족도도 높고 본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혹시 이것이 근로자들의 불안정성이나 고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단시간근로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아주 적합한 직종들이 찾아지는 대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하고 그것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분만요……

어쨌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유연화 또 아주 저임금 양산하는 유연화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부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최영희 위원 주부인턴 3개월, 50만 원씩 줘 가지고 주부인턴 3개월 이후에 실제 채용 비율이 85%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대 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감소가 3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일자리 핵심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아니라 출산·육아 이런 것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물론 여성부만의 대책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한 여성 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출되는 여성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걸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이것을 노동부와 함께 협의하셔서 좋은 그런 자료를, 대책을 좀 논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국무총리실장님, 아까 제가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전문계고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에서의 요구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알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취업지원관제도 이번부터 시작하시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대학교 150개교 올해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 학교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 취업지원관……

○노동부장관 임태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200개 학교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취업지원관이 주로 인사·노무 경력자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잡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지원관이 이 분야의 경력자 말고 기업을 아는 사람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은행에서도 일자리 1만 개 창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은행이니까 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기업 현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업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구직자를 연결해 주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2만 개 일자리 창출로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취업지원관을 뽑으실 때 기업을 아는 사람을 좀 뽑으셨으면 좋겠고, 청년·중소기업 일자리TF팀 만드셨잖아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배은희 위원 이 TF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잡 미스매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배은희 위원 그래서 이 취업지원관 선발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직업 상담을 하는 분들이 대개 학교 교직원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안내를 하는데 조금 충분치 않아서 기업 경력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사나 노무 담당하던 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업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지 어떤 기업이 좋고 거기에 좋은 잡이 있다는 걸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은행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취업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스펙을 갖춰야 된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어디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를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 보면 좋을 거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빈 일자리를 찾아내는 역할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한 기업만 아는 사람보다는 기업을 두루두루 아는 그런 경력자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바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일을 하도록.

○배은희 위원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고 내용에 보다 보니까 임상시험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에서,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춰 주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경쟁력도 갖춰 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프라 갖추는데 여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쪽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너무 좀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임상시험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1개소 더 늘리는 거거든요. 09년

에 14개소에서 올해 15개소, 그러니까 확충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계획이, 목표가 너무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지역임상센터 확충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확충하는 것만 표시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병원의 새로운 경향은 과거의 진료 중심에서 지금은 진료 중심과 동시에 연구 중심 병원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임상을 하면서 신물질도 개발을 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신의료기기도 개발해야 되고……

○배은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또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아니라도 외국계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임상시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외자 유치도 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부 지원 예산으로만 하는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그러니까 신약 관련해서 인허가 제도 개선과 연결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넣으시고 이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대단히 고급 일자리이고 또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경쟁력 강화 산업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임태희 장관님께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그리고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한 위탁 교육 그리고 디딤돌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 사실 2010년도 2월 기준으로 보면 중도 포기율이 한 20.6%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도 포기율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의 이유가 업종별 비중이 광업·제조업에 약 45.4%가 몰려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모아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영표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지방 관서가 민간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 사업운영기관에서 인턴 모집·알선 등의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업운영기관은 사업주단체나 출연기관이나 대학, 직업알선기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가 아마 81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운영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운영기관의 목록, 위탁운영비 지급 건수·지급 금액,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우선 아까 중도 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구직, '직장탐색기간'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그 기간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포기한 게 한 13%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또 집에서 공부를 더 하라고 그런다 이런 개인적 사정으로 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56.9% 정도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인턴이고 취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으로 가는 사람부터 꼭 직장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번 직장

을 탐색하는 또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기업에서 바로 가서 좀 안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이려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했더니 대개 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은 가급적이면 기업들 쪽에서 맞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 하고 면담을 통해서 맞는 인력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인턴을 뽑는 절차도 조금 보완을 할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영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민간사업운영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꼭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보내 주실 거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들이 구직자를 발굴하는 능력 같은 게 아무래도 노동부는 기다려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런데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워낙 실업급여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기관 차원에서 발굴해 내는 것이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여건이 어렵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인턴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92.2%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3억 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유가 '민간 취업알선기관인 운영기관의 이행보증보험 한도 초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8%,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비정상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인턴만을 채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하고 매 2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연내에 인턴 기간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반기에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말에 끝나지 않고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 집행이 좀 부진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통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윤석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석용 위원 강동을의 윤석용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나 복지부 같은 데는 좋은 일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려 해도 힘 있는 기재부에서 사실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총리실장님 오셔서 부탁을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와 또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회의에서 많이 나왔고 또 복지부 보고에서도 보건복지 관계의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스웨덴 같은 데는 고용비율이 16.4%인데 우리는 3.16%, 이게 G20 회의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부한테나 복지부에는 너무, 말씀을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추경 때 결혼이민여성, 탈북여성,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예산 배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참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이번 추경 때 다시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아직 추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윤석용 위원 지금부터 고려해야지요, 3월 달인데.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정규 예산심의 때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 소요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짜 가지고라도 여성장애인들 이런 데는 좀 예산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등록장애인 한 2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여성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면 2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고용률이. 이게 얼마나 열악한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졸 이상, 대졸 여성들의 취업률이 OECD 중에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실패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새일센터 같은 것을 여성부, 노동부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일센터가 민간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컴퓨터 조회를 구인·구직자 정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있는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방대한 양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일정 분야밖에 못 합니다. 이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생각은 노동부는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접근해서 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석용 위원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늘 나오는 장애인 고용문제, 의무고용률이 지금 3% 되어 있는데 보훈처 같은 데는 5.6%, 상당히 많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혹시 장애인들하고 원수진 게 있는지 제일 낮은데 1%도 안 된다…… 요새는 몇 % 됐습니까, 의무고용률이?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0.65%.

차관님도 나이 들면 장애인 됩니다. 연세 들면 허리 굽어지고 무릎팍 아파지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당장 해야지요, 정부에서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노동부장관님, 이것 전 부처마다, 이게 사실 국회에서 매년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윤석용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힘이 없어 그런지 노동부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전부 다 제대로 안 지키면 이것은 정부가 능력이 부족한지 노동부가 없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여튼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윤석용 위원 실적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안 한 데 외교통상부 이런 데는 혼을 좀 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저런 데 어떻게 놔둡니까, 계속?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올해 외교통상부에서 1명 채용을 했고요……

○윤석용 위원 1명 채용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2명 더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저도 장애인으로서 외국에 나가니, 장애인이 외국 나오니까 더 감명을 받고 외교가 더 잘 됩디다.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어요? 장애인이 다 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자리를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또 그런 분들만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국무총리실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제대로 안 되면 지시도 하고 채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저희 국무회의 때 취업 실적을 부처별로 이렇게 해서 보고 대통령 앞에서도 보고를……

○윤석용 위원 백날 보고해 보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또 창피도 주고 합니다.

○윤석용 위원 창피 줘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차관님을 갖다 그것 안 되었다고 한번 딱 잘라 버리면 금방 다 올라갑니다, 이게. 본때를 한 번만 보여 줘요.

(웃음소리)

내가 진짜 부탁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처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좀 신경 써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부터 법을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홍희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국무총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 고

용전략회의도 매달 이렇게, 작년에 없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열고 계시고 그런데 원래 일자리 관련해서 기존의 추경예산이, 예산의 뒷받침 없이 우리 부처에서 그냥 일자리 대책이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다, 특별하게 국회에 일자리특위도 만들고 고용전략회의도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이를테면 전체 우리 국가 예산의 한 1%라도 좀 새로운 예산이 뒷받침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일자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 뒷받침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 문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홍희덕 위원 아, 그러니까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대통령께서도 직접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도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회의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 좀 되어야지요, 새롭게. 그러려면 정말로 전체 예산의 1%라도 더 추경을 세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현재 저희들 있는 예산을, 금년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노동부에 지금 신고되어 있는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의, 많지요,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다시 한 번만……

○홍희덕 위원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조가 신고를 노동부에 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홍희덕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규약 있지요, 규약?

○노동부장관 임태희 규약이요?

○홍희덕 위원 예, 규약을 좀 보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변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허가제로 되어 있는 양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반려가 됐고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권 내에는 공무원노조 신고필증을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두 차례의 설립 신고를 노동부에 하면서 보완 내용을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시했는데 반려 이유가,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항목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수정하지 않아서 반려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근래에 제가 일본의 '나오시마'라고 하는 섬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리광산이었다고 하는데 폐허가 된 섬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관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생태 환경이 아주 잘 정비된 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하고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오시마는 물론이고 그 옆의 섬은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살고, 나오시마라는 섬의 주민이 3500명이랍니다. 다 그와 관련된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그런 사업마다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또는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줘서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

면, 저희 지역은 도자기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세라믹은 치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만드는 것이 세라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 예컨대 덴탈 시티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치과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주로 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빨 치료하는 사이에 관광도 하고 또 거기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가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치료도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틀을 떠서 온라인으로 보내 주면 우리가 여기서 다 기공해서 택배로 다 부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앙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 또는 이런 규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유치하는 데 우리가 길을 열어 주겠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 준다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진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비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규제도 필요한 부분에 완화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가이드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사업별로 아주 딱 붙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정진섭 위원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를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필요하고 어떤 가용한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잘 아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환노위에서 일을 할 때 이상수 장관 계실 때 '이 일을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니까 거기 다 주고 돈만 관리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혹은 다른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 하는 데서 좀 도와줄 부분을 후선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도 매우 애를 쓰시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더욱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지사나 시장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는 또 하나의 제도 개선이고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할 수가 있는데 무엇에 걸리고 무엇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고, 뒤에서 북을 쳐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 그런 일은 저절로 다 풀려져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까 죽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 참고로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 거기 컨설팅부터 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그때 만약에 규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뷰티산업을 기업형으로 육성·개편하게 될 경우에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김재균 위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서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뷰티산업이 이·미용실이나 피부미용 같은 분야지요. 그런데 이들 분야는 대부분 자영업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5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8월 19일 날 법인 이·미용 개설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위원회 주최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 바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하였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미용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비록 공청회가 지금 무산이 됐지만 정부에서는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2010년 상반기 중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예정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 보고 내용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미용업이나 피부미용업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의 뷰티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미용실 개설 허용을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는 업소를 만들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현행법에는 면허를 가져야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에는 저희 부처와 달리 면허가 없더라도 그냥 자본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을 허용해 주자고 하는 의견을 가진 부처도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로서는 일단 면허 개설자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지금 법인 이·미용 개설 허용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이들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착상을 하시게 되면 도리어 기존 영세 사업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확고한 장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뷰티산업에 이용업, 미용업, 피부미용업은 원칙적으로 면허 개설자가 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허 개설자가 업소를 만들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서 많은 고용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가진 경우에도 저희들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고 내용을 제가 보니까 5인 이상의 뷰티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인 이상의 뷰티기업—기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여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들과 경쟁하는 영세업자, 소규모 미용업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대개 혼자 가게를 열어서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것은 다른 어떤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다만 그동안에 뷰티산업 같은 것은 아예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부분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5인 이상의 뷰티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은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형 산업 재편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지경부 소속인데, 대형마트나 SSM 등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계획에는 이러한 산업 재편으로 인한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전혀 지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 영세업소들이 폐업하고 말 것이고, 그리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산업 재편은 불가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오히려 기존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면허를 가진 청년인력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기존 영세 자영업자도 영업을 잘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산업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실무자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외통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 일자리 해소에 앞으로 외통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고한 것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외교통상부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인력도 수출하고 수입하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턴만 보내고 서비스산업 쪽에 아주 단순 그런 쪽으로만 진출할 것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에 과감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외교통상부가 하고 있는 것은 연간 한 5~6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국내 고용시장에서 취업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5~6만 명 정도를 매년 해외에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외교통상부가 하는 일인데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적인 또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시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서 직접 구하는 일도 KOICA의 해외봉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인턴도 하고 다 하지만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워킹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모든 나라하고 지금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그것을 우리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제가 호주를 갔더니만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한국인 업체에, 업소에, 음식점에 가서 한국말로, 거기서 아무 배우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지 업체, 만약에 미국 간다고 하면 미국 대기업에 직접 취업을 해서 그쪽 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천영우 그런 역할도 하고……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리실의 실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할 때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그러한 로드맵, 타임 스케줄을 한번 챙겨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관계부처 차관을 소집해서 바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 만들고 어떻게 진전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워킹홀리데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점검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 가능한 대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주면 외교통상부가 크게 박수받을 겁니다. 청년 일자리 해소에……

또 그분들이 비록 오래 견디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그만큼 더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외교통상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정희수 위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100만 명이 넘는…… 정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으로 웰빙시대에, 고령화시대에 이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물론 분야별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라든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부분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으로 보면 선진국의 80% 수준 이상입니다.

○정희수 위원 80%……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더, 1등 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 보아서는 한 80% 수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의료시장이나 서비스 쪽을 과감하게 개방하는 그런 계획은 정부 쪽에 없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지난해에 저희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해 준 이후에 해외환자 유치가 지역산업의 활로가 되기도 하고 유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 말고도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설명드린 뷰티산업이라든지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이라든지 u-헬스산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 제약이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할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컨대 최근에 건강보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같은 데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냥 식약청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도와주려고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어서 외국 제약사가 비교적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해외의 유명한 병원도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하면 결국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열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자체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뛰어난 인재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혹시 복지부 차원에서 앞으로 개방의 로드맵이 있다면, 또 없다면 그런 걸 구상을 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떤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의료법인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벌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이니까 1분 더 쓰겠습니다.

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정부 전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8조 9000억, 한 9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취약계층 부분의 비중이 한 몇 %나 되나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9조 원 가까이 되는 돈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몫이 한 몇 %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글쎄, 사실 일자리예산은 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근로취약계층, 워킹푸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정희수 위원 한 10% 됩니까? 제가……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그건 통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총리실 권태신 실장님, 우리가 이것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주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취약계층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 재정을 너무 잘못 운용하고 있지 않으냐, 그래서 시기가 한 2011년, 내년에 또 9조 원이나 되는 돈을 또 그렇게 할는지 미리 내가 걱정이 돼서……

○노동부장관 임태희 아까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 17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에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아마 변경된 체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걸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촘촘하게 그 제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자리를 표준화를 시켜서 파트타임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감한 연봉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을 자유롭게 해 가지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일자리가 많이 유연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총리실이나 노동부 쪽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1~2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시간 계산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노동부장관 대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사업,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지금 09년 실상을 보면 희망근로는 44%, 행정인턴은 4%,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인턴은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졸 이하가 12.6%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윤석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실업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2월 말 현재 12.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여성부의 이 자료를 보면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36페이지, 37페이지 자료를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8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은 2010년에 거의…… 이것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방과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방과후아카데미는 모델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도 지금 인터넷 중독이나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이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에 제가 관련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부장관님은 금방 받아서 모르고 계시고 저는 넘겨줬다고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만 여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확실하지요. 이것은 복지부가 안고 있을 때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대단히 섭섭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여성부는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어떻게 이 예산을 또 넣어 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좀 늘려 보겠다고 한 것일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날지 걱정됩니다. 확실하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미운 소리 좀 한 가지 할게요.

이것 여성부로 넘어갈 거니까 예산 투쟁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 이관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위원님께서 그냥 한번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줄었던 사업은 추경 대비하면 줄었지만 본예산 대비하면 대부분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대규모 재정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데요, 제가 그냥 말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여기 실무진에서 답변은 지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는 추경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추경이 안 들어가서 좀 감소했고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들에서 같이 하는데 그 배분이 약간 연도별로, 올해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는 대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배분이 지역아동센터로 갔지요? 이쪽 걸 빼서 그리로 넘겼지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예,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등 비경제부문 6개 부처에 대한 고용 관련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광림 위원 강석호 위원 김성식 위원 홍희덕 위원 성윤환 위원 김용구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은 우리 특위 제3차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 오셨고 또 앞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장관님들께서도 많은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다, 고용은 성장의 종속변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 물론 대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가져오는 고용효과는 없거나 작지만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부장관께서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을 만든다고 하셨고 또 이것을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6월 중에는 확정하겠다, 이렇게 노동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문제, 고용에 대한 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정책과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 제도와 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우리 특위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단계까지 현재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 시대에서 또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우리가 개방형 경제체제가 필요한 한 기업에만 맡겨서는 고용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문제 많이 얘기된 것, 사회적 기업 이런 문제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서 새롭게 부담해야 될 국가의 역할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아마 새롭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부서로 성장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국무총리실장님하고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한참 하셨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국무총리실장께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아마 빨리 극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극복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많이 했지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 투입을 빨리해 가면서 극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의 모든 전략이 대기업 주도의 수출의존형 극복전략을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의존형 극복전략으로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보고 있고 이론적으로 봐서도 그동안의 극복전략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서 6월 달까지, 5월까지 만드는 고용전략에 충분한 우리 정치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그리고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을 비롯해서 오늘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4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광림	김성식	김재균	배은희
백재현	변재일	안효대	윤석용
이명수	정진섭	정희수	최영희
홍영표	홍희덕		

○청가 위원(2인)

김용구 박준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전문위원	김광묵

○정부측 참석자

국무총리실

실장	권태신
사회통합정책실장	김석민
재정금융정책관	권태성
문화노동정책관	김원득
평가관리관	최대용
규제총괄정책관	김효명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기획조정실장	최원영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배병준
보건의료정책관	노길상
건강보험정책관	최영현
건강정책국장	최희주

장애인정책국장	고 경 석
노 인 정 책 관	김 원 종
보 육 정 책 관	권 덕 철
노동부	
장 관	임 태 희
고용정책실장	신 영 철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갑
인력수급정책관	임 무 송
직업능력정책관	임 서 정
고용평등정책관	권 영 순
고용서비스정책관	장 의 성
여성가족부	
장 관	백 희 영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 태 석
여성정책국장	정 봉 협
청소년정책관	전 혁 희
가 족 정 책 관	임 관 식
외교통상부	
제 2 차 관	천 영 우
개발협력국장	설 경 훈
조 정 기 획 관	최 연 호
인 사 기 획 관	한 충 희
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 수 존
행정안전부	
제 2 차 관	강 병 규
지역발전정책국장	오 동 호
인 사 정 책 관	김 성 렬
정 책 기 획 관	심 보 균